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과 당파성의 역할*

오현진**

팬데믹이 확산될수록 잘못된 정보 역시 빠르게 전파되는 현상을 가르키는 이른바 인포데믹(Infodemic)의 문제는 실제 개인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허위정보에 취약할수록 백신 접종 거부나 방역지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정부의 위기관리 조정비용을 상승시키는 등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갈수록 뉴미디어 환경을 통해 허위정보의 유포와 확산이 용이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누가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취약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본 논문은 당파성(Partisanship)과 당파적 양극화(Partisan polarization)의 심화라는 정치적 환경이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 2021년 8월 말 실시한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과 시민인식에 관한 온라인 패널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 논문은 당파성의 유무 자체보다도 당파성의 방향과 당파적 양극화의 강도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일반 시민의 믿음 혹은 불신 경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주제어: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당파성, 당파적 양극화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NRF-2018S1A3A2075609).

** University of Virgini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비교정치, 정치문화, 민주주의와 시민정치 등이다 (hyunjinoh@hanyang.ac.kr).

I. 서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하 코로나19)의 확산과 대유행이 2년여가 넘게 지속되면서, 주요 국가의 방역체계는 더이상 확진자 발생 감소에 방점을 둔 봉쇄나 이동제한과 같은 사회적 부담이 큰 강력한 방역조치보다는 백신접종을 확대를 통한 위중증 및 치명률 감소에 보다 초점을 맞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전환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한국 역시 현재 인구 대비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비율이 86.4%(3차 추가 접종 비율은 61.1%)를 넘어서는 등 높은 접종률을 보이며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폭발적인 확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있다.¹⁾ 아직 확실한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접종률에 기댄 주요 국가의 방역체계 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성공적인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방역 및 의료체계의 정립과 더불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위생수칙 준수와 같은 사회적 책임의식과 협조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Bartscher et al. 2020). 또한 방역 및 백신관련 정부 지침이나 발표가 사실에 근거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시민의 믿음 역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시민의 친사회적 행동유인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줄 것이다(Fukuyama 2020; Oksanen et al. 2020; Han et al. 2020; Harring et al. 2021).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감염병 및 백신과 관련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가 꾸준히 생성·유포되면서 정부 방역지침이나 예방접종 캠페인 전반에 대한 일반 시민의 부정적 시각과 불신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 방역지침에 대한 시민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정부 위기관리 조정비용의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코로나 19 관련 각종 허위정보의 유포와 확산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과 피해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대면교류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환경에서, 당파적 미디어에 대한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이나 확증편향 효과(Confirmation bias)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Tucker et al. 2018). 이에 따라 최근 많은 선행연구들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일반 시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수용 의사, 또는 정부

1)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2022/2/27, 참고: <https://ncv.kdca.go.kr>)

방역정책 전반의 성과 평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등과 같은 가설에 대하여 설문조사자료 및 실험방법을 통해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Cinelli et al. 2020; Krause et al. 2020; Loomba et al. 2021; Romer & Jamieson 2020; Singh et al. 2022). 그러나 Druckman et al.(2021a)의 지적처럼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믿음이 정부 방역지침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평가에 미치는 결과적 차원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질문이 있다. 즉 과연 과학적 검증이나 팩트체크를 거치지 않은 채 소셜미디어상에 무분별하게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누가 더 취약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아직은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본 논문은 개인의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 중 하나인 당파성(Partisanship)과 당파적 양극화(Partisan polarization)의 심화라는 정치적 환경이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대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정치체의 원활한 작동은 투표로 선출된 정부가 시민 다수의 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며, 시민은 정부의 정책성과에 대한 보상과 심판의 기제로서 투표를 행사하는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의 유기적 연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투표선택이나 정치적 지지 혹은 반대가 정부성과에 따른 사후적 보상과 심판의 기제로서가 아니라 이와 유리되어 당파적 신호에 의존하게 된다면 정책 반응성(Policy responsiveness)과 민주적 문책가능성(Democratic accountability)을 담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유인이 약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위급한 공중보건위기 시에도 정부 방역대응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나 평가가 과학적 근거나 객관적 성과에 근거하기보다는 당파적 정체성이나 정치엘리트가 생산해내는 당파적 신호(Cue)를 따라 움직인다면 위기대응을 위한 정부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감시해야할 사회적 압력은 점차 효력을 잃게 된다.²⁾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일반 시민의 믿음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당파적 편향성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갖는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는 당파성의 유무 자체보다도 당파성의 방향과 당파적 양극화의 정도가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보다 뚜렷한 균열선을 형성한다는 주장을 지지하

2) 미국을 중심으로 이미 많은 선행 연구들이 팬데믹 시기에 실시한 인식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방역지침 준수나 방역정책 지지 등에 있어 당파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경험적으로 분석해왔다 (예: Allcott et al. 2020; Calvillo et al. 2020; Druckman et al. 2021a, 2021b; Gadarian et al. 2021; Grossman et al. 2020; Lipsitz & Pop-Eleches 2020 등 참고).

고 있다. 기존 연구 중에서는 어느 당을 지지하는가 보다는 당파성을 확실히 가졌는지의 여부 자체가 개인의 외부 정보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지지하는 경험적 근거를 보여주기도 한다(Druckman et al. 2021a).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당파적 정체성을 보유한 이들은 외부 정보의 처리시 객관적 사실보다는 주관적 정체성에 기반한 인지적 동기(Identity motivation)에 의존하게 되며 반대로 당파적 정체성이 미미하거나 이로부터 자유로운 무당파 집단은 보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인지적 동기(Accuracy motivation)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Druckman 2012). 따라서 이러한 가설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의 형성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떠나 당파적 정체성이 강한 집단과 무당파 집단 사이에서 뚜렷한 균열선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당파적 정체성의 영향력은 인정하지만 당파적 정체성의 유무보다도 정치제도적 현상유지(The political institutional status-quo)를 추구하는 현 집권세력을 배출한 정당을 지지하는지, 혹은 정권교체를 통한 현상타파를 대리하는 상대 정당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즉 당파적 정체성이 현 권력경쟁구도 가운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과 '상대적 거리'가 유권자의 인식과 행태적 특성을 예측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보는 연구이다(Lipsitz & Pop-Eleches 2020; Knuppenkin 2021). 이를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시민의 인식과 태도 형성에 있어서 당파적 정체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나 주요 균열이 어떠한 집단 사이에서 표출되는 지에 대한 예측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집단 간 균열이 당파적 정체성의 보유 여부(Partisans v.s. Non-partisans)를 기반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주로 현 집권세력이 소속된 정당의 지지 집단(Presidential co-partisans)과 반대 정당 지지 집단(Presidential out-partisans) 사이에 더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보일 지에 따라 경쟁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나아가 만일 당파성의 방향이 중요하다면 지지 정당에 비하여 상대 정당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거나 비슷할 때, 즉 주관적으로 느끼는 당파적 양극화 정도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믿음 혹은 불신 경향이 더욱 강화 또는 약화되는지를 당파성과 당파적 양극화의 상호작용을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가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SSK '정부의 질과 거버넌스의 다양성 연구단'이 2021년 8월에 실시한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과 시민인식에 관한 2차 온라인 패널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있어 당파성의 영향과 관련하여 앞서 서술한 두 경쟁가설 중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자료는 어느 주장을 더 지지하는지 검증해보며 공중 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사회적 인식의 경로를 파악해 봄으로써 향후 감염병 관리와 예

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도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기존 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1. 정치적 양극화 시대 공중보건위기대응의 정치적

최근 정치적 양극화 추세는 엘리트 수준의 전통적 이념갈등 양상을 뛰어넘어 비(非)정치적 영역에서도 대중의 지지 정당에 따른 내집단(Partisan in-group)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외집단(Partisan out-group)을 향한 배타적 태도가 두드러짐에 따라 사회정체성에 기반한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지지 정당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동시에 상대 정당 및 그 지지자들에 대한 적대적 정서가 커지면서 정서적 간극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당파적 편향성이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 및 지지 형성, 정책성과 평가, 나아가 대인관계와 채용선발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주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국내외 연구들은 이미 상당히 축적되었다(Iyengar et al. 2012; Iyengar & Westwood 2015; Iyengar et al. 2019; 길정아·하상용 2019; 김기동·이재목 2021). 이러한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은 각 정파 엘리트의 편향적인 이슈 프레임과 언론매체를 통한 재생산 및 당파적 뉴스 소비의 확증편향 등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Levendusky, 2013; Lelkes et al. 2017; Druckman et al. 2018; 장승진·한정훈 2021).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초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원인과 치료법 등에 대한 허위정보를 포함한 공적 발언이 파생시킨 혼란이 보여주듯이 과학적 전문성의 영역에서 엄밀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공중보건위기에 직면해서도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개입하여 당파적 언어를 통해 정보가 재가공되고 무분별하게 유포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Calvillo et al. 2020; Lipsitz & Pop-Eleches 2020; Druckman et al. 2020, 2021b). 물론 Lipsitz & Pop-Eleches(2020)의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수나 사망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심각한 위기국면에서는 당파적 편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둔화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전개된 코로나19 위기상황의 경우에도 발생 초기 유례없는 신종 감염병 확산 통제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의 가동이 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하에 코로나19 위기대응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에서 빗겨나 있던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 응답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나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와 같은 강도 높은 방역지침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역시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동체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의무라고 여기는 비율이 여전히 상당히 높은 편이며 방역지침에 대한 자발적 준수 역시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³⁾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는 확진자 발생 감소에 초점을 둔 초기의 방역대책에서 백신접종률 달성 및 위중증 환자치료에 방점을 둔 코로나19 감염병과의 공존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보다는 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현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 및 백신정책의 실질적 효용과 과학적 근거를 둘러싸고 보다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기 쉬운 환경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 발생 초반 경제활성화나 개인의 자유보다도 방역이 우선이라는 초당적 합의가 우선이었다면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범위와 강도, 정부의 백신 수급과 접종계획 등 총체적 관리의 책임 주체가 정부에 전가되기 쉬운 이슈들이 부상하면서 팬데믹의 정치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본 연구는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거나 의학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및 백신 관련 허위정보에 누가 더 취약한지, 정보의 인지와 수용에 있어서 당파성의 역할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사회적 인식의 형성과 당파성의 역할

코로나19 위기대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개인 및 집단수준의 요인 가운데 외부 정보에 대한 합리적 인지과정을 제약하는 당파성의 역할을 다루는 연구들은 일견 비정치적 사안으로 보이는 보건위기 역시 당파적 이슈가 된 지 오래되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Allcott et al. 2020; Druckman et al. 2020; Gadarian et al. 2021). 특히 이들은 팬데믹 이슈가 정치화될수록 팬데믹 관련 정보를 수용하는데 있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에 의존한 판단보다는 다양한 집단정체성에 의존하는 인지 기제의 차이에 주목한다(Druckman et al 2021a: 640). 그렇다면 백신을 포함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한 허위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은 실제 어떠한가 어떠한 집단적 특성이 허위정보에 대한 일반 시민의 믿음을 형성하는데

3) 참고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인식조사 자료 가운데 관련 설문조사 문항으로 우선 “정부 방역 지침을 따르는 것은 국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0.75% 였으며, 반대로 “정부 방역지침을 따르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25%에 그쳤다. 또한 정부에서 권고한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사적 모임 피하기등)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항에는 ‘철저히 지키고 있다’와 ‘대체로 지키고 있다’를 합한 응답비율이 약 94%에 이른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수준의 요인과 함께 특히 당파성의 역할에 주목하며 이와 관련한 두 가지 경쟁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의 두 가설은 모두 당파성의 역할은 인정하고 있지만 당파성이 어떻게 응답자의 인식 형성에 개입하는지에 대한 상이한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집단수준의 특성에 주목한 Druckman et al(2021a)의 연구를 토대로 당파성의 보유 여부에 주목하는 연구가설이다. Druckman et al(2021a)은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과 함께 각종 매체를 통해 전파된 바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허위정보⁴⁾에 대한 오인(Misperception) 정도를 지수화하여 분석한 결과 인종적·종교적·당파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집단간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를 믿는 비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가의 여부를 떠나 무당파 집단보다는 당파적 정체성이 강한 집단일수록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오인 확률이 높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Druckman et al(2021a)의 연구에 따르면 당파적 정체성이 미미하거나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보다는 당파적 정체성을 강하게 느낄수록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를 믿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외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객관적 사실 관계의 규명이나 합리적 근거자료에 기반한 사고를 하려는 동기보다는 내집단의 정체성과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처리하는 인지적 기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Accuracy vs. Identity motivation, Druckman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당파적 정체성 보유 여부가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인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가설을 도출한다. 즉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자료에서도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동기화된 사고(Motivated reasoning)를 유발하는 당파적 정체성을 보유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이며, 무당파 집단일수록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오인의 가능성은 다른 두 정당 지지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외부 정보에 대한 합리적 인지과정을 제약하는 개입 요인으로서의 당파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비슷하나 Druckman et al(2021a)과 달리 당파성의

4) 참고로 Druckman et al.(2021a)은 세계보건기구(WHO)의 COVID-19 Mythbusters (<https://www.who.int/westernpacific/emergencies/covid-19/information/mythbusters>)에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를 수집하였다.

‘방향’에 초점을 두고 지지 정당이 현 집권세력과 일치하는 지 여부에 따라 정부의 위기대응에 대한 평가나 방역 및 백신정책에 대한 신뢰 여부가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대표적으로 Knupenkin(2021)은 현 집권세력이 속한 정당의 지지 집단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감염병 통제와 관리를 위한 정부 지침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현 집권세력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정권교체를 호소하는 정당의 지지 집단에 속할수록 현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와 함께 감염병 관리를 위한 지침과 규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거나 호응도가 약할 것으로 예측한다. 특히 양당 중심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치체에서는 현상유지(Status-quo)를 원하는 집권세력 지지집단을 정의할 때 국회에서의 다수당 여부보다는 일반 대중에게 보다 가시적인 현재 집권자인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지지하는 집단(Presidential co-partisan)을 의미한다(Knupenkin 2021: 453). 이들과 뚜렷한 균열선을 그리는 집단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보다는 정권교체라는 현상타파를 원하는 상대 정당을 지지하는 이들(Presidential out-partisan)이다. Knupenkin(2021)은 소속정당이 다른 조지 W. 부시와 오바마 정권하에서 추진된 대표적인 감염병 예방접종 캠페인 사례(e.g. 신종인플루엔자(H1N1), 홍역(Measles) 등)를 통해 당시 대통령 소속정당 지지 집단과 반대 집단간 백신 부작용에 대한 위험 인식과 백신 접종 의사에 있어 위의 가설에 부합하는 명확한 당파적 인식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경쟁가설을 중심으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즉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형성에 있어 주요 균열선을 당파성을 보유한 집단과 무당파 집단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Druckman et al(2021a)의 연구를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혹은 국민의 힘 지지 집단보다 무당파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오인(Misperception) 정도가 낮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가설 1). 이와는 달리 현상유지를 바라는 현 대통령 소속정당 지지 집단과 정권교체를 원하는 상대 정당 지지 집단간 인식 차이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당파적 편향성이 시민의 정부 방역 및 백신정책에 대한 순응적 태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는 Knupenkin(2021)의 연구를 따라 현재 집권 중인 대통령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수록 코로나19 관련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거나 명백한 오류를 포함한 허위정보에 대하여 보다 방어적이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정권교체라는 현상타파를 원하는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집단일수록 정부 주도의 방역관리 상황에서 정부의 위기대처 역량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정보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보다 신빙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가설 2).

추가적으로 본 논문은 당파성에 따른 인식 차이(Partisan perception gap)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당파적 양극화 수준에 주목한다. 당파적 양극화는 지지 정당과 상대 정당에 대해 느끼는 긍정과 부정적 정서의 상대적 차이이자 주관적 거리감을 의미하는 변수로서 주로 감정온도계(Feeling thermometer) 질문에 대한 응답이나 상대 정당 지지자들과 교류할 때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 등으로 측정하기도 한다.⁵⁾ 만약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인식에 있어 당파적 균열이 나타난다면 당파적 양극화의 정도가 심할수록, 즉 정서적 거리감이 클수록 정치적 현상유지 집단과 세력교체를 원하는 집단간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 격차가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당파적 양극화는 지지 정당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반대 정당에 대한 긍정적 인식간 차이로 정의하며 이러한 상대적 거리감이 클수록 당파적으로 편향된 사고를 더욱 강화하는 상호작용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가설 3). 만일 이 가설의 예측대로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위기와 관련한 정보의 수용과 처리과정이 당파적 편향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할 것이다.

III. 연구자료 및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SSK ‘정부의 질과 거버넌스의 다양성 연구단’에서 2021년 8월말 온라인 패널 1,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과 시민인식에 관한 2차 패널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주요 변수의 측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 변수인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믿음 정도는 총 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문항셋트에 대한 응답결과를 취합하여 신뢰하는 편이라 응답한 문항 갯수가 최소한 1개 이상일 경우를 1, 그 외는 0의 값을 갖는 이항변수(Binary variable)로 측정하였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예시로 선정한 문항들은 기초과학연구원(IBS)-카이스트(KAIST)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내연구진과 국외 여러 학자들이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수집건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현황을 여러 국가 언어로 공유하는 ‘루머를 앞선 팩트(Facts Before Rumors)’ 웹사이트에서 수집하였다(세부문항내용과 응답 비율은 <표 1> 참고). 독립변수인 당파성(Partisanship)은 ‘현재 지지하고 있는 정당’

5) 일반 유권자 수준에서의 정치적 양극화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는 Iyengar et al. 2019: 131-134; 김기동·이재욱 2021: 59-61 참고.

〈표 1〉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오인 비율(% , 명)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믿음 (매우신뢰+약간신뢰)	
소금물과 식초로 가글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제거된다	4.4%(48/1103)
마늘, 생강, 양파, 유산균 섭취등으로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수 있다	7.8%(86/1103)
바이러스에 취약한 특정 집단, 인종, 민족이 있다	11.1%(122/1103)
외국인에게 검진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다	25.3%(279/1103)
코로나19 백신은 치매나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다	9.7%(107/1103)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선진국에서는 안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맞는다	18.5%(204/1103)

참고: 2021년 8월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과 시민인식에 관한 패널여론조사(2차) 자료.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예시 문항 출처는 Facts before rumors
 (<https://www.ibs.re.kr/fbr/#Modal-14>)

에 대한 응답결과를 통해 측정하였고 가설 1을 위해 각각 더불어민주당 지지, 국민의힘 지지, 지지하는 정당 없음(무당파) 집단으로 분류한 변수(PID)와 현 대통령 소속 정당 지지와 반대의 2개 집단으로 분류한 변수(Copartisans vs. Outpartisans)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⁶⁾ 일반 시민의 상대 정당에 대한 주관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당파적 양극화 변수의 측정은 Charron et al.(2020)의 연구에서 활용한 대리 변수(Proxy variable)를 참고하여 무당파 집단을 제외하고 지지 정당에 따른 내집단 정당에 대한 신뢰도에서 외집단 정당에 대한 신뢰도를 차감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즉 이 값이 클수록 지지 정당에 대한 높은 신뢰도에 비해 상대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당파적 거리감, 즉 양극화 정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로는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과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응답자의 특성 가운데 선행연구에서 주로 고려되어온 정치이념(진보(0)-보수(10))과 정부신뢰 정도(매우 불신(1)-매우 신뢰(4))를 비롯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매우 적다(1)-매우 크다(4)), 기타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인 연령(18-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성별(여성(1)-남성(0))·소득(100만원 미만(1)-1000만원 이상(11))·교육수준(초등 졸업(1)-대학원 재/졸업(6)) 등을 통계모형에 포함하였다. 연속형 변수는 모두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재조정하였다.

통계모형은 종속변수가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경우를 1, 그 외를 0값으로 하는 범주 수가 2개인 이항변수이므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6) 이 논문에서는 당파성의 보유 여부(가설1)와 방향(가설2)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현상유지와 현상타파를 대변하는 양대 정당 지지 집단과 무당파 집단을 제외한 기타 정당 지지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있다.

(Binary logit model)을 이용한다. 분석모형은 우선 당파성의 영향에 대한 경쟁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당파성을 무당파를 포함한 세 집단으로 코딩한 모델 1과 현 대통령 소속정당을 지지하는 집단과 반대 집단으로 코딩한 모델 2로 구분한다. 한편 당파성과 당파적 양극화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지 정당에 대한 신뢰도와 상대 정당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Partisan trust gap)로 측정된 양극화 지수와 당파성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델 3을 검증해본다. 상호작용항에 포함될 당파적 양극화 변수값은 평균을 0, 표준편차를 ± 1 로 표준화 처리하였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문항에 대한 응답빈도수와 같은 기술통계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뒤 이어서 회귀분석 결과를 서술하고자 한다.

IV.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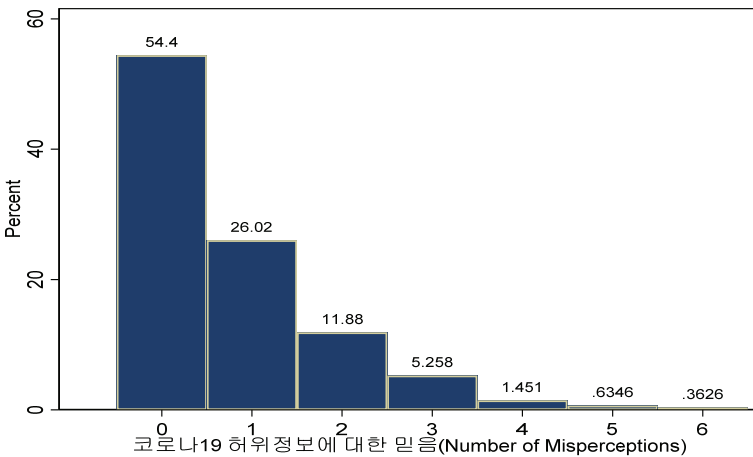
1. 기초통계

회귀분석에 앞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문항에 대한 신뢰 정도를 측정한 총 6문항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조사에 열거된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시중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각종 정보들에 대하여 팩트체크와 검증을 목적으로 개설한 온라인 캠페인 “Facts before rumors” 웹사이트에서 제공된 예시들을 인용하였다. 6개의 문항들은 허위정보의 유형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의 고유 특성 및 예방법과 관련한 의학적 사실의 오류, 감염병 치료 관련 제도운영에 대한 잘못된 정보,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정보들로 크게 구성하였다. 각 문항별 응답범주는 “매우 신뢰한다”(1)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5)의 척도이며 <표 1>은 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 신뢰”와 “약간 신뢰” 라고 응답한 비율과 응답자 수를 보여주고 있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확산 되고 있는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믿지 않는 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이나 치료, 백신의 부작용 등과 관련된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정보에 대해서 신뢰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불과 4~11% 이내 에 그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부의 확진자 치료 지원제도나 백신 수급 승인과 관련한 허위정보들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1/5~1/4에 해당하는 18%~25% 정도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의학적 허위사실과 비교해볼 때 정부개입과 역할이 보다 가시적인 허위정보유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오인할 비

율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라 볼 수 있다.

〈그림 1〉은 총 6개 문항 가운데 신뢰한다고 응답한 문항의 갯수 별 응답자 비율을 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들은 누구이며, 어떠한 집단적 특성이 발견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편인 응답을 1로 그 외 응답을 0으로 재코딩하였고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6개의 문항 중 신뢰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문항 갯수가 하나도 없는 이들이 전체 응답자 1103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600명(54%)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신뢰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문항 갯수가 1개인 응답자는 287명(26%)으로 오인 갯수가 1개 이하인 응답자가 전체의 80%에 해당할 정도이다. 물론 대다수의 응답자가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해 믿는 편이 아니라는 점은 긍정적인 결과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허위정보의 전파와 확산이 정부 방역지침 및 백신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그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및 백신 접종의향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누가 허위정보에 취약한지를 밝히는 이 연구의 결과는 여전히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중 응답자가 믿는다고 대답한 응답 갯수 (총 6개)



참고: 2021년 8월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과 시민인식에 관한 패널여론조사(2차) 자료.

2. 회귀분석

앞서 소개한대로 먼저 당파성 변수를 무당파를 포함한 3개의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표 2〉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믿음 회귀분석 결과 (Logistic Regression)

	종속변수 (Misperceptions)		
	모델 1 Logistic (PID)	모델 2 Logistic (Presidential Copartisan)	모델 3 Logistic (Copartisan *Polarization)
무당파	-0.047(0.171)		
국민의 힘 지지	0.725*** (0.236)		
더불어민주당 지지		-0.745*** (0.273)	-1.134*** (0.264)
더불어민주당 지지 × 양극화 양극화			-2.519*** (0.796) 1.861*** (0.616)
정부신뢰	-0.502(0.273)	-0.511(0.394)	
연령	0.029(0.197)	0.083(0.287)	-0.025(0.293)
여성	0.474*** (0.132)	0.716*** (0.186)	0.781*** (0.19)
교육	-0.366(0.331)	-0.144(0.451)	-0.143(0.459)
소득	0.55(0.298)	-0.14(0.415)	-0.099(0.423)
정치이념	-0.045(0.414)	-0.023(0.515)	-0.487(0.556)
감염 위험인식	0.24(0.268)	0.56(0.373)	0.568(0.382)
Constant	-0.451(0.393)	0.134(0.581)	0.399(0.596)
Observations	1,001	526	522
Log Likelihood	46.21	40.92	49.72
Pseudo R-squared	0.033	0.056	0.069

Note: *p<.1 **p<.05 ***p<.01

2021년 8월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과 시민인식에 관한 패널여론조사(2차) 자료.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오인 가능성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모델 1을 통해 검증하였다. 〈표 2〉의 모델 1 결과를 보면 기준범주를 더불어민주당 지지 집단으로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계수(p<.01 수준)를 보인 집단은 국민의 힘 지지 집단이며 양(+)의 회귀계수는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국민의 힘 지지 집단이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를 믿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당파 집단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해석을 돕기 위해 집단간 차이를 승산비(odds ratio)로 나타내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국민의 힘 지지 집단은 기준범주인 더불어민주당 지지 집단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를 믿을 가능성이 2.06배 정도 높게 나타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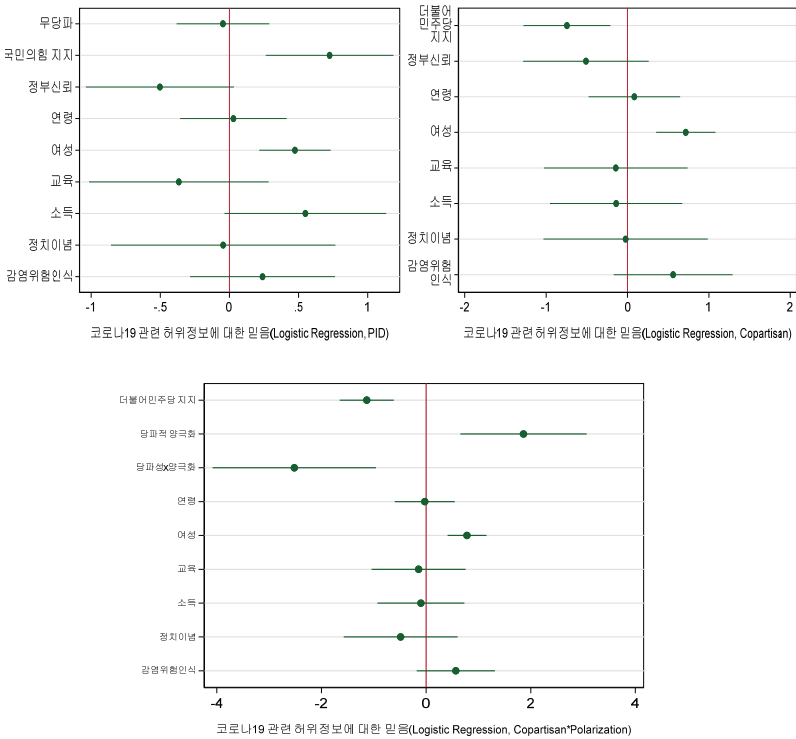
다. 모델 1의 결과는 어느 당을 지지하는 지보다는 무당파 집단과 당파적 정체성을 보유한 집단간 인지과정에서 작동하는 기제의 차이(Accuracy vs. Identity motivation)를 강조한 Druckman et al.(2021a)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즉 무당파 집단이 당파적 정체성을 보유한 집단에 비해 외부 정보 인지시 주관적 정체성이나 가치요소 보다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으로 예측한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인 것이다. 반대로 이 분석결과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인식에 있어서 현 대통령 소속정당 지지 집단과 반대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당파적 균열이 더 뚜렷함을 보여주며 Knupenkin(2021)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현상유지를 원하는 현 집권세력을 배출한 정당의 지지 집단은 정부 위기대응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해 보다 경계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편이라면 현상타파를 추구하는 상대 정당 지지 집단은 허위정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쉽게 믿는 편이라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 가운데는 연령이나 교육수준, 코로나19 감염 위험인식 정도 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가운데 성별 집단간 정보 오인 확률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여성일수록 남성에 비해 코로나19 허위정보를 믿을 가능성이 1.6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델 2는 당파성 변수를 무당파 집단을 제외한 채 현재 집권중인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지지하는 내집단(Co-partisan)과 이와 경쟁하는 상대 정당을 지지하는 외집단(Out-partisan)의 두 집단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허위정보에 대한 믿음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검증하고 있다. 예상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현 대통령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집단은 국민의 힘 지지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코로나19 허위정보를 믿을 가능성이 0.47배 정도에 불과하며 뚜렷하게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번 모형에서도 당파성 변수외에는 성별 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보여주며 여성일 경우 남성에 비해 코로나19 허위정보를 믿을 확률이 2.04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모델 3은 앞선 두 모형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당파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당파적 양극화 수준에 따라 당파적 편향성의 영향이 더 강화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보다 직관적인 해석을 위해 승산비(Odds ratio)를 구해보면 예상대로 현상유지 집단인 더불어민주당 지지 집단은 정권 교체에 대한으로서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집단에 비해 코로나19 허위정보를 믿을 가능성이 0.3배에 그친다. 이에 비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국민의 힘 지지자의 경우 양극화 지수가 평균보다 1 표준편차만큼 높을 경우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를 신뢰할 가능성이 6.43배만큼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당파성과 당파적 양극화 변수간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음(-)의 계수를 가짐으로써($p < .01$),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양극화 정도가 강할수록(즉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국민의 힘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경우) 허위정보를 믿을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시 이때도 다른 통제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일수록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를 믿을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추후 사회적 인식의 젠더 격차 특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림 2>는 위에서 서술한 회귀분석 결과를 회귀계수 그래프를 통해 차례로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회귀계수 그래프



아래 <그림 3>은 양극화 수준, 즉 지지 정당과 상대 정당에 대한 신뢰도 차이에 따라 코로나19 허위정보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당파적 균열이 더 가중된다는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양극화 정도에 따라 각 정당 지지 집단의 코로나19에 관한

V. 요약 및 함의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될수록 잘못된 정보 역시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현상을 가 르키는 이른바 ‘인포데믹(Infodemic)’의 실질적 피해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 다. 국내에서는 2020년 3월 경기도 한 교회에서 소독을 이유로 예배참석자들의 입에 소금물 분무기를 분사해 대규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고 비슷한 시기 이 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메탄올이나 표백제를 마신 500여명이 사망 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⁷⁾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을 둘러싼 허위정보 역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빠르게 번져나가는 등 허위정보의 유형과 양상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소위 정보감염증의 문제는 실제 개인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허위정보에 취약할수록 백신 접종 거부나 방 역지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위기대응을 위한 효과적 거버넌스의 작동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코로나19 위기대응은 물론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위기가 재발될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는 팬데믹 뿐만 아니라 인포데믹이라는 잘못된 정 보와 편향된 인식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허위정보를 신속히 선별해내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전달과 소통에 힘쓰며 대중의 인식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 또한 공중보건위기의 정치화와 당파적 양극화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치권으로부터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독립된 위상을 확보한 전담 기구가 위기 대응을 위한 방역지침의 수립 및 일반 대중과의 소통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평소 소셜미디어의 이용이나 당파적 미디어 이용 빈도 등이 허위정보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선택적인 노출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코로나 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일 수 있으나 이번 조사 에 관련 설문문항이 포함되지 않아 모형에서 고려되지 않는 등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간과되어온 누가 더 허위정보에 취약한지에 대한 질문을 본격적으로 던지며 당파성과 당파적 양극화의 심화 현상이 공중보건위기 상황 에서도 감염병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데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다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탐색적 시도로서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7) 2020.08.13 동아사이언스 기사 참고(<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9006>).

■ 참고문헌

- 길정아 · 하상웅. 2019. “당파적 편향에 따른 책임 귀속: 여야간 갈등인식과 정당 호감도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25(1): 46-79.
- 김기동 · 이재묵. 2021. “한국 유권자의 당파적 정체성과 정서적 양극화.” 《한국정치학 회보》, 55(2): 57-87.
- 장승진 · 한정훈. 2021. “유튜브는 사용자들을 정치적으로 양극화시키는가?: 주요 정치 및 시사 관련 유튜브 채널 구독자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현대정치연구》, 14(2): 5-35.
- Allcott, Hunt, Boxell, Levi., Conway, Jacob, Gentzkow, Matthew, Thaler, Michael, & Yang, David. 2020. “Polarization and Public Health: Partisan Differences in Social Distancing During COVID-19.”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1: 104-254.
- Bartscher, Alina Kristin, Seitz Sebastian, Sieglöcher Sebastian, Slotwinski, Michaela, & Weherhöfer. 2020. “Social Capital and the Spread of COVID-19: Insights from European Countries.” *CESifo Working Paper*, No. 8346, Center for Economic Studies and Ifo Institute (CESifo), Munich.
- Calvillo, Dustin P., Ross, Bryan J., Garcia, Ryan J. B., Smelter, Thomas J., & Rutchick, Abraham M. 2020. “Political Ideology Predicts Perceptions of the Threat of COVID-19 (and Susceptibility to Fake News About It).”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1(8): 1119-1128.
- Charron, Nicholas, Lapuente, Victor, & Rodriguez-Pose, Andrés. 2020. “Uncooperative Society, Uncooperative Politics or Both? How Trust, Polarization and Populism Explain Excess Mortality for COVID-19 across European Regions.” *QoG Working Paper Series*, 2020: 12,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 (QOG).
- Clark, Cory, Davila, Andrés, Regis, Maxime, & Kraus, Sascha. 2020. “Predictors of COVID-19 Voluntary Compliance Behaviors: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Global Transitions*, 2: 76-82.
- Cinelli, Matteo, Quattrocioni, Walter, Galeazzi, Alessandro, Valensise, Carlo M., Brugnoti, Emanuele, Schmidt, Ana. L., Zola, Paola, Zollo,

- Fabiana, & Scala, Antonio. 2020. "The COVID-19 Social Media Infodemic." *Scientific Reports*, 10(1): 1-10.
- Druckman, James N. 2012. "The Politics of Motivation." *Critical Review*, 24(2): 199-216.
- _____, James N., Levendusky, Matthew S., & McLain, Audrey. 2018. "No Need to Watch: How the Effects of Partisan Media Can Spread via Interpersonal Discuss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2(1): 99-112.
- _____, James N., Klar, Samara, Krupnikov, Yanna, Levendusky, Matthew, & Ryan, John B. 2021. "How Affective Polarization Shapes American Political Beliefs: a Study of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Experimental Political Science*, 8(3): 223-234.
- _____, James N., Ognyanova, Katherine, Baum, Matthew A., Lazer, David, Perlis, Roy H., Volpe, John D., Santillana, Mauricio, Chwe, Hanyu, Quintana, Alexi, & Simonson, Matthew. 2021a.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Partisanship in Misperceptions about COVID-19."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24(4): 638-657.
- _____, James N., Klar, Samara, Krupnikov, Yanna, Levendusky, Matthew, & Ryan, John B. 2021b. "Affective Polarization, Local Context, and Public Opinion in America." *Nature Human Behaviour*, 5: 28-38.
- Gadarian, Shana K., Goodman, Sara W., & Pepinsky, Thomas B. 2021. "Partisanship, Health behavior, and Political Attitudes in the Early Stages of the COVID-19 Pandemic." *PLoS ONE*, 16(4): e0249596, available at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49596>
- Fukuyama, Francis. 2020. "The Thing That Determines a Country's Resistance to the Coronavirus." *The Atlantic*, 2020(March 30).
- Grossman, Guy, Kim, Soojong, Rexer, Jonah M., & Thirumurthy, Harsha. 2020. "Political Partisanship Influences Behavioral Responses to Governors' Recommendations for COVID-19 Prevention in the United Stat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7(39): 24144-24153.
- Han, Qing, Zheng, Bang, Cristea, Mioara, Agostini, Maximilian, Bélanger, Jocelyn J., Gützkow, Ben, Kreienkamp, Jannis, & Leander, Pontus N.

2021. "Trust in Government Regarding COVID-19 and Its Associations with Preventive Health Behaviour and Prosocial Behaviour During the Pandemic: A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Study." *Psychological Medicine*, 1-11.
- Harring, Niklas, Sverker Jagers C., & Löfgren, Åsa. 2021. "COVID-19: Large-scale Collective Action, Government Intervention, and the Importance of Trust." *World Development*, 138: 105236.
- Iyengar, Shanto, Sood, Gaurav, & Lelkes, Yphtach. 2012. "Affect, Not Ideology: A Social Identity Perspective on Polariz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76(3): 405-431.
- _____, Shanto, & Westwood, Sean J. 2015. "Fear and Loathing across Party Lines: New Evidence on Group Polariz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9(3): 690-707.
- _____, Shanto, Lelkes, Yphtach, Levendusky, Matthew, Malhotra, Neil, & Westwood, Sean J. 2019.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Affective Polar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2: 129-146.
- Krupenkin, Masha. 2021. "Does Partisanship Affect Compliance With Government Recommendations?." *Political Behavior*, 43: 451-472.
- Krause, Nicole, M., Freiling, Isabelle, Beets, Becca, & Brossard, Dominique. 2020. "Fact-checking as Risk Communication: The Multi-layered Risk of Misinformation in Times of COVID-19." *Journal of Risk Research*, 23(7-8): 1052-1059.
- Lelkes, Yphtach, Sood, Gaurav, & Iyengar, Shanto. 2017. "The Hostile Audience: The Effect of Access to Broadband Internet on Partisan Affec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1(1): 5-20.
- Levendusky, Matthew. 2013. "Partisan Media Exposure and Attitudes Toward the Opposition." *Political Communication*, 30(4): 565-81.
- Lipsitz, Keena, & Pop-Eleches, Grigore. 2020. "The Partisan Divide in Social Distancing.",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3595695>.
- Loomba, Sahil, De Figueiredo, Alexandre, Piatek, Simon J., De Graaf, Kristen, & Larson, Heidi J. 2021. "Measuring the Impact of COVID-19 Vaccine Misinformation on Vaccination Intent in the UK and USA."

Nature Human Behaviour, 5: 337-348.

- Oksanen, Atte, Kaakinen, Markus, Latikka, Rita, Savolainen, Iina, Savela, Nina, & Koivula, Aki. 2020. "Regulation and Trust: 3-Month Follow-up Study on COVID-19 Mortality in 25 European Countries." *JMIR Public Health and Surveill*, 6(2): e19218, available at <https://doi.org/10.2196/19218>.
- Romer, Danel, & Jamieson, Kathleen H. 2020. "Conspiracy Theories as Barriers to Controlling the Spread of COVID-19 in the US." *Social Science & Medicine*, 263: 113356, available at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20.113356>
- Singh, Karandeep, Lima, Gabiel, Cha, Meeyoung, Cha, Chiyoung, Kulshrestha, Juhi, Ahn Yong-Yeol, & Varol, Onur. 2022. "Misinformation, Believability, and Aaccine Acceptance over 40 Countries: Takeaways from the Initial Phase of the COVID-19 Infodemic." *PLoS ONE*, 17(2): e0263381, available at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63381>.
- Tucker, Joshua A., Guess, Andrew, Barbera, Pablo, Vaccari, Cristian, Siegel, Alexandra, Sanovich, Sergey, Stukal, Denis, & Nyhan, Brendan. 2018. "Social Media, Political Polarization, and Political Disinformation: A Review of the Scientific Literature.",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3144139>.

《동아사이언스》. 2020. "코로나19 가짜뉴스로 1~3월 사이 800명 숨졌다." 8월 13일.

The Role of Partisanship in Public Perceptions About the COVID-19 Misinformation

Hyunjin Oh

As the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has had a severe effect and became politicized across the world, we have witnessed that the rapid spread of misinformation and misperceptions about the COVID-19 have been damaging to personal health as well as inflicting massive social costs for managing the public health crisis. Growing concerns about the social consequences of the COVID-19 infodemic have lead scholarly works to focus mainly on the extent to which people with misperceptions ignore the government guidelines or hesitate to vaccinate. However, much less empirical work has asked who are more susceptible to embrace misinformation. Using a online panel surve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misperceptions about the COVID-19 are distributed among the public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role of partisanship and partisan polarization. This analysis found that the direction and strength of partisan identities play a crucial role in embracing the COVID-19 misinformation. It also shows that presidential out-partisans tend to embrace substantially greater misperceptions than presidential co-partisans, and the partisan perception gap is more pronounced for those with higher levels of partisan polarization.

※ Keywords: COVID-19 misinformation, Partisanship, Partisan polarization